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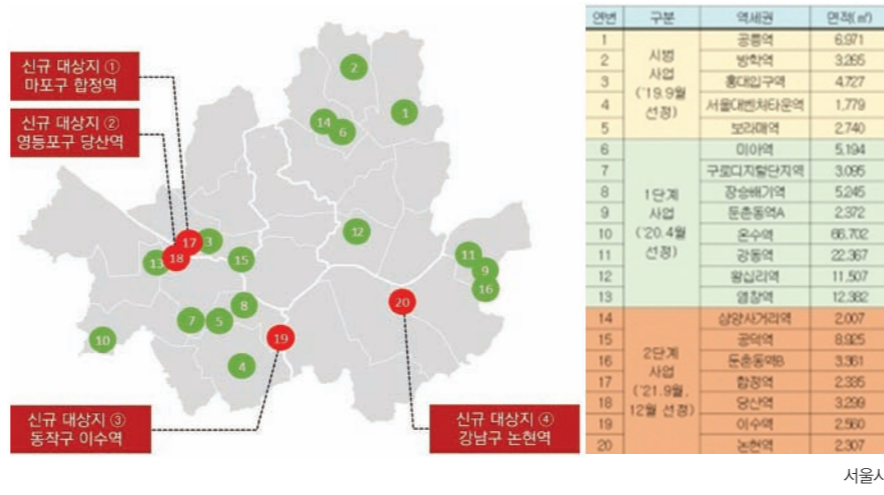
합정·당산·이수·논현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추가

새역사 들어서는 상업·업무기능과 가로 활성화 필요 서울시, 용적률 높여 민간·공공 함께 생활편의 높여

4곳서 신규주택 618가구 공급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규 대상으로 4곳을 추가했다. 시는 14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마포구 합정역과 영등포구 당산역, 동작구 이수역, 강남구 논현역 주변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

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어린이집·보육시설·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주택)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9월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 대상지는 모두 20곳이 됐다. 시는 2027년까지 약 100곳의 인허가



서울시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대상지 등 현황.

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역사가 신설돼 상업·업무기능 강화와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여의도·마포·용산 등 업무 요충지를 연결하는 합정역 주변(부지면적 2천335㎡)에

는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해 입주기업과 연계한 멘토링 클래스를 운영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당산역 주변(부지면적 3천299㎡)은 2·9호선 환승 역세권이 광역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일대 노후저어용 부지를 개발해 양호한 도심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공유오피스와 도서관 등 시설을 확충한다.

이수역 주변(부지면적 2천560㎡)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인접 대학과 연계해 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강남 도심이자 가구거리에 있는 논현역 주변(부지면적 2천307㎡)은 가구·인테리어

특화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공공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과 주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

4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총 61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또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장기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종주 기자

“주택자산도 양극화 갈수록 심하다”

상위 1% 주택 4.75호 보유, 가액도 하위 10% 比 69배 증가 부동산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려 재분배 효과 나타나게

통계청 통계 분석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도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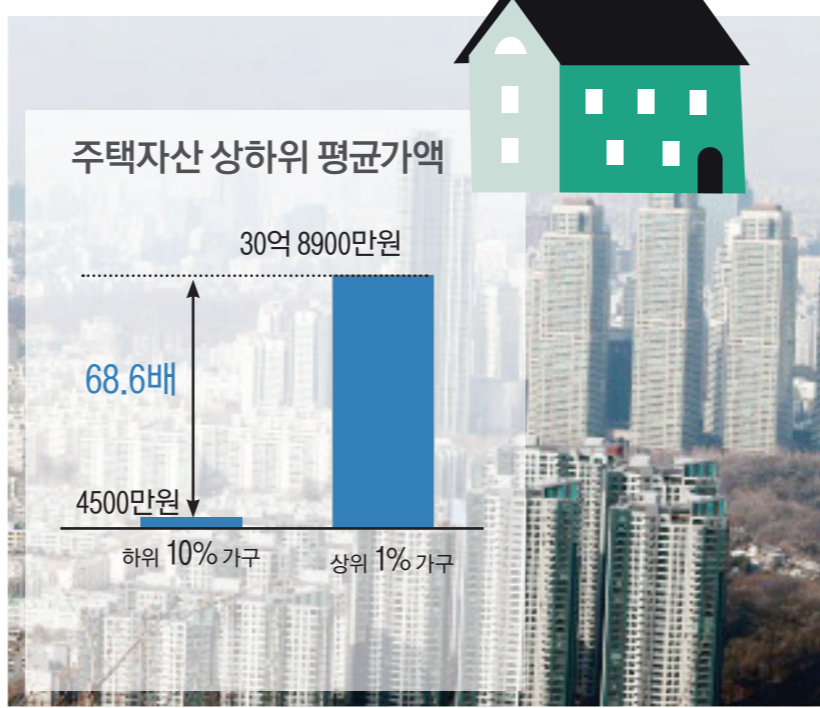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였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했다. 상위 1% 가구의 주택 수가 하위 10% 가구 대비 약 5배 가량 많게 나타난 것이다.

상위 1%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9억원이었다.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 4천 500만원 대비 약 68.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8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30.9억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택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 대비 십 수배 적다는 뜻이다. 생애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했다. 소득이 부족해 가족찬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도 1만 5907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다주택자 절반 이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를 차지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20대 이하 다주택자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경기도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1만 5907명)의 52.1% 수준이었다.

김희재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불평등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혐의없음’ 처분

남편이 농지에 과실수 경작... 취득 시점 공소시효 지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의 가족이 받았던 경기도 연천군 농지에 관한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됐다.

경기도부경찰청은 14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임대 및 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더해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경찰은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도 밝혔다. 매매 시점에 김 전 장관의 동생들



공통취재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됐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어렵다고 전했다.

농지 부정 취득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고발인 측이 고발을 취하했다.

경찰 수사는 올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로부터 비롯됐다. 이 단체가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고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 지자체와 공조했다”고 전했다. 이종주 기자

너희 집? 나의 집?
아니예요!
우리모두의 집이래요!
우리집 바닥은
이웃의 천장이니까요.



층간소음 예방
www.noisedu.com